

우리의 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지속가능국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깨끗한 환경, 에너지 자립강화, 생태친화적 국토관리로 국민행복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는 대신 이를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국토를 환경복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계로 복원하고, 이를 유지해 미래세대도 함께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과제입니다. 환경을 희생하는 성장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습니다. 환경과 성장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안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심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에너지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은 반드시 국제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세계적인 도전과제입니다. 최근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우리나라는 이제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정부를 만들어 국제 환경 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물, 공기 등 환경서비스의 품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새누리의 진단

-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56% 정도로 도시지역보다 낮고 축산분뇨로 인해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
- 대기, 해양수질, 하천 등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수준에 근접하는 80%선으로 높이고, 축산분뇨를 에너지화 방식으로 처리
- 오염지천,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 대기오염총량제 강화, 천연가스버스·전기차 보급, 개방식 쓰레기차량의 탱크로리(Tank Lorry)형 밀폐식 수거차량으로의 대체 등으로 대기의 질 개선
- 해양수산 자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적조 등 수질개선 대책 강화
- 환경오염처리시설에 대해 허가기간 만료시 최상기술(BAT)을 적용한 재허가 기준을 설정하여 환경기술 시장을 활성화

새누리의 실천

- 실효성 있게 환경규제 정비
- 환경오염처리시설의 허가 기준 개편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호

새누리의 진단

-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구미 불산 누출 사고처럼 오염피해지역이 산업시설을 넘어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위험 증가
- 주요 질환의 약 80%는 환경적 위험 인자와 관련된 질환이며, 특히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 시설들의 실내 공기 질은 상대적으로 열악

새누리의 약속

- ‘장의 영향평가제’(Off-site Consequence Analysis)를 도입·시행하여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같은 환경재해의 근원적 예방대책 제도화
※장의영향평가: 유사시 사업장 바깥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여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
-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대폭 인상(현행 30%→70%)
- 어린이, 노약자, 여성 등 환경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환경 재난 유형별로 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관리방안 마련 및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새누리의 실천

- ‘장의 영향 평가제’ 등 도입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

새누리의 진단

- 환경오염피해의 유발자에게 배상을 강제할 법규정이 없어 환경오염행위가 만연하고 환경정의 실현에 장애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구제능력이 부족하여 사회분열·갈등 심화
- 환경서비스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새누리의 약속

-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도입
-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실패해액, 복구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상액 결정 등
- 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독물 생산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법제화
-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
-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새누리의 진단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 발생
 - 한반도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00년 372PPM에서 2011년 384.9PPM으로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름.
 - 집중호우는 1990년대 7.7일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12.8일로 증가하였고,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1980년 694.5mm에서 2011년 1,048.1mm로 증가
-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국토 및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자연재해 취약지역을 일제 정밀 조사하여 피해위험의 근원적 방지책 수립
- 자연재해 예방적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국토·도시계획 재정비
- 재해예방형 안심국토 구현을 위해 국토·도시계획 체계를 정비하여 방재 인프라를 전면 구축

새누리의 실천

-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령 정비
-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조성

새누리의 진단

- 소득 증대로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녹지 공간(특히 도시 녹지 공간)은 매우 적은 실정
- 도시공원 조성률은 2011년 현재 48%이고, 2020년까지 미집행되면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도시공원을 공원 취약지역이면서 환경서비스 제공 효과가 큰 곳부터 국비를 지원하여 조성
- 생활주변에서 녹색생활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권 마을림 조성
- 개발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산길, 물길 되살리기와 품격있는 도시·농촌 생태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하여 건강한 녹색휴양의 기반인 금수강산의 생명축을 복원 조성

새누리의 실천

- 도시공원 관련법령 정비
- 도시공원, 마을림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새누리의 진단

- 현재 국토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은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토의 이용과 보전을 조화시키기 보다는 개발쪽에 치중
- 토지이용·개발과 관련된 인·허가와 각종 평가들이 지나치게 많고 분산되어 있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 생명국토로 영속시키기 위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 연계 되도록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새누리의 실천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

새누리의 진단

- 현재의 토지이용관련 인·허가제도는 수많은 인·허가를 연달아 받아야 하는 후진국형임.
- 대규모 토지이용 인·허가시 주민의 의사가 배제되어 주민 갈등이 심화

새누리의 약속

- 후진국형 토지이용 인·허가 방식을 일괄(One-Stop) 통합 인·허가제로 전환
-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토지이용은 주민이 사전공람하도록 하고, 제기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와 그 이유를 인·허가서에 명시, 재공람하게 하여 인·허가 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 교통, 재해, 산림, 농지 등 각종 평가·협의 제도들을 통합하여 토지의 이용·개발 관련 통합 인·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

새누리의 실천

-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및 ‘주민참여제도’ 도입
- 교통·재해·산림·농지 등 관련법의 각종 평가·협의 제도 통합 추진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새누리의 진단

- 원전 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전력부족으로 정전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 지속

새누리의 약속

-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히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 구축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 정책 추진
 -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원전의 폐기도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
 - ※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란?
극단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원자료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구성 검사'
-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관리 비리 재발 방지

새누리의 실천

- 관련 법령 개정
-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체계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새누리의 진단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불확실성으로 정부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
- 전력, 가스 시장의 독점 구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 초래
-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으로 전기사용이 불편하고 수요관리 효과가 낮음.

새누리의 약속

- 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 목표(2020년, 2030년) 및 달성 전략 수립
-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전면 개편
-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

새누리의 실천

- 에너지세제 개편

자원 ·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가 심각한 상황
- 국내 소비 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해외 자원 · 에너지 시장의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음.
-우리나라 화석연료 수입액은 2000년 330억 달러에서 2010년 1,211억 달러로 2.7배 증가

새누리의 약속

- 에너지 · 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
-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Zero)화
- '매립부담금제' 도입으로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 기반 완성

새누리의 실천

- (가칭)「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 제정
- 재생 자원 · 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 · 통계체계 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 구축
- 폐기물자원화시장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개편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새누리의 진단

- 국내 소비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의 안정화가 절실한 과제
- 최근 전력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등 에너지공급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새누리의 약속

-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우리나라를 잇는 가스파이프라인 사업 지속 추진
- 현재 진행 중인 동해안 오일허브에 동북아시아 석유거래의 거점을 구축하여 석유공급의 안정화 도모

새누리의 실천

- 사업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새누리의 진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아직도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속적인 기름값 상승으로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현실화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 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
- 고유가시대 화물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되고 있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새누리의 실천

- 전기가격 누진제 개선
- 에너지세제 개편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의 중심국으로의 도약 기반 구축
- 철강·화학·시멘트 업종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72.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에너지효율은 선진국 수준이어서 추가적 온실가스 저감 비용 부담이 높음.

새누리의 약속

-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
- ‘경제개발 모델국가’이자 ‘환경보전 모범국가’로서,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 ODA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새누리의 실천

- 온실가스의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발전적 재구성

남북 환경공동체 구현

새누리의 진단

- 향후 북한의 경제성장에 따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고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북한의 환경상태는 환경기초시설의 부재, 삼림황폐화 등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알려짐.
- 최근 북한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사업을 하는 등 자체적으로도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음.
- 통일 대비 남북한 경제공동체뿐 아니라 환경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환경기술에 대한 남북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우리의 경험·지식·기술 공유
- 북한 나무 심어주기를 통해 북한의 홍수예방과 함께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확보
- ODA사업을 통해 북한의 환경기초시설 건설 지원
- 개성공단에 재생에너지단지를 구축하여 새로운 재생에너지원 확보 및 남북 에너지공동체 구축 시작

새누리의 실천

- 관련 법령 개정